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세 곤



‘호남 땅은 나라의 울타리입니다/만약 호남이 없으면 곧바로 나라가 없어질 것입니다/그래서 어제 한산도로 진을 옮겨 바닷길을 가로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있는 ‘충무공 이야기’ 전시관에서 이 글을 보았다. 이 글은 1593년 7월 16일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친구 현덕승에게 쓴 편지 중 일부다. 명량대첩 4D 영화도 감상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려고 전투를 회피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13척 대 133척의 싸움에서 이긴 울돌목 해전,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감동이 왔다. 호남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필자는 요즘 임진왜란을 호남 사람들이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그래서 주말에는 자주 역사 현장을 다닌다. 지난 몇 주 동안 해남 우수영, 행주산성, 진주성과 남해를 답사했다. 진도대교 아래 물살은 여전히 울음이 운다. 명량대첩비도 해남 충무사에서 원래 자리인 우수영으로 옮겨져 있다.

경기도 고양의 행주산성은 행주대첩 체험장이다. 입구에 있는 청동 부조에는 1593년 2월12일 행주대첩은 권율이 이끄는 전라도 관군과 의병, 승군과 행주치마를 두른 부녀자들의 총력전이었다고 새겨져 있다.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다

충의정에서 ‘권율과 행주대첩’ 영화를 보았다. 권율은 광주에서 의병을 모아 이치전투에서 왜적을 막았고, 광주공원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설명이 영화에 나온다. 그리고 보니 권율이 광주목사에서 전라도 순찰사로, 도원수로 승진한 것은 전라도 사람들 덕분이다.

지난 일요일에는 민족사의 공간 진주성을 찾았다. 진주성에는 임진왜란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 1592년 10월 초 김시민의 진주대첩, 1593년 6월의 제2차 진주성 싸움, 그리고 푸른 남강에 몸을 던진 의기논개.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에 적힌

글은 의미가 깊다.

‘경상우도와 호남은 입과 입술의 관계이어서 경상우도가 없으면 호남이 없고 호남이 없으면 나라의 앞날은 가망이 없었다’

국립진주박물관 앞에 전시된 화차 모형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번이종이 만든 것이다. 한 유치원생이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는 백발백중이라고 말한다. 참 기특하여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니 광주에서 왔다네. 빛고를 광주.

창렬사 사당에는 김시민, 김천일, 황진, 최경회, 고종후, 장윤, 양산속 등의 신위가 모시어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2차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한 호남의 의병장들이다. 명군과 관군도 포기한 진주성을 열흘간이나 사수하다 죽은 전라도 의병들. 이런 악착에 질려서 왜군은 승리하였으나 호남 공략을 포기하고 만다. 지금도 진주 시민들은 호남의 의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진주의 지식인들이 자주 정철사를 방문하면 김천일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내친김에 남해대교를 들렀다. 이 근처가 바로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 노량해전이 일어난 곳이다. 이순신은 완도 고군도에서 전라도 수군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왜군을 끝까지 쫓았다. 총렬사에는 이순신의 가묘가 있다. 조금 더 가니 관음포 앞바다이고 이순신의 시신이 처음 모시어진 이락사(李落祠)가 있다. 이씨 성을 가진 큰 벌이 바다에 떨어진 것을 추모하는 사당.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고 적힌 빗 돌 앞에서는 그만 숙연해진다.

답사를 하는 동안 내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생각하였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작업이다.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여 삶에 유의함을 주는 학문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하나.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적혀 있는 글귀가 그 답을 준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한번 그 역사에 얽매게 되나’

한국사가 다시 고고 필수과목이 되었다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런데 역사 공부는 그냥 책에서 배우고 스승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삶에서 배우고 역사 현장에서 느끼는 열린 공부이어야 한다. 진주성에 만난 어린아이처럼 어릴 때부터 역사 유적을 다니면서 호남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진실로 ‘호남국가지보장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변철형

법과 나

그 결과 우리 국민의 법의식은 크게 성숙하였고, 법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도 아주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의 법치주의는 아직도 여러 곳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법의 존재이유조차 망각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주변에는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의도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집단행동도 쉽게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의 철학자 로크는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법과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진정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가려 줄 사람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 줄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사회는 ‘법의 지배’ 위에서만 유지, 존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입법과정에 의해 고안한 규범이 존재하고, 모든 구성원이 그 규범을 존중하고 따를 때 이루어진다.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구라도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법의 지배는 원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성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관련된 태두리에 대한 법의 지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며 자기합리화 하려는 성향이 있고, 이로 인해

모든 불법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나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나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법의 지배를 통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법의 주인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회이다.

법치사회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법의 의의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바탕이 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또한 나도 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상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식이 통용되어야 누구나 법과 원칙을 지키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 고



박종대

녹차산업, 위기가 기회다

의 기운이 하루 정도 경과하면 동해(凍害)를 받게 되는데, 올해는 영하 12도 이하 기온이 4일 이상 경과됐고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 30여 년 만에 피해가 극심했다.

따라서 첫물차의 수확이 예년에 곡우 전후인 4월20일경부터 이뤄진 것에 비하면 올해에는 피해를 적게 받은 다원은 10일, 심하게 받은 다원은 45일 이상 첫물차의 수확이 늦어지고 일부 다원은 올해 차의 수확이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차가 산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69~1973년 사이로 전남도 농특사업으로 보성군 화천면 일대에 대단위 차밭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당시 500ha에 불과하던 차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3600ha, 그중 전남이 2600ha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 역시 2600t으로 전국 최대이다.

그러나 차소비는 2003년부터 2007년 초 반까지 전국적으로 웰빙 바람을 타고 급격히 증가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성장속도가 미미하다. 최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의 붕괴와 더불어 방사능 누출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우려는 점차 높아가고 있다.

일본차는 주산지인 시즈오카와 가고시마에서만 우리나라 차 생산량의 10배가 넘는 연간 4만5000t을 생산하고 있으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자연히 차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기가 기회라 했던가? 봄의 불행은 이용하거나 편승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정당하고 타당하게 활용한다면 우리의 정당한 환경에서 자란 친환경산물인 녹차가 전세계로 뿔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리라 기대 본다.

환경친화적이고 노동절약적인 재배와

과학적인 품질관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에게 우리 녹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 차가 처음 산업으로 정착할 당시 주로 종차 파종을 통한 재래종 다원을 조성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재해에 강한 품종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기능성을 강화한 원료 공급 차원의 품종 육성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지원을 계속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재해보상 대상작물에서 제외되어 왔던 차나무가 정부의 적극적으로 수용으로 대상작물로 선정된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차나무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로 지정돼 차 재배 농업인이 좀더 안정적으로 차를 재배하고 기능성 고품질의 차를 지속적으로 공급, 최고 품질의 차제품의 생산을 통한 강한 농업(強小農)으로 한국 차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국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장〉

여기면 운전 전문학원 자격을 박탈당하도록 돼있다. 그런데도 학원들은 장애인인 경우 교육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교육을 꺼리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운전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운전면허 연습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수·광주시 북구 운영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 설

‘만성 적자’ 광주지하철 개선 방안 모색해야

광주지하철이 개통 7년을 맞이했지만 만 만성 적자로 인해 시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승객, 국가 유공자 등 무임승객 증가와 운송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요금으로 인해 승객이 늘면 늘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자체 수익 창출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28일 개통한 광주지하철의 올해 1일 평균 승객은 4만8197명으로 지난 2006년 3만112명에 비해 60.0%가 증가했고, 올 교통수단 수송분담률도 2.2%로 지난 2005년의 1.1% 보다 2배나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승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채는 876억6600만 원, 광주시의 지원금도 390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시는 정부의 계속된 공공요금 동

결 방침에 따라 4년간 요금(1인당 1000원)을 인상하지 않고, 노인층이나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해 무임승차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시책에 따른 지원금 요구가 억지로 비칠 수는 있다. 하지만 누적 적자가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달리 도리가 없다. 광주시는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타 광역시와 공동보조를 취해 재정 부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야 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역시 역사(驛舍)의 유휴공간 내 상업 및 문화시설 입점 유치와 환승주차장 유료화 등 도시철도 전반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운영 인력의 최소화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 등도 예외일 수는 없다.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난비할 수는 없질 않는가.

결도는 출산 장려 실질적 지원책 시급하다

정부의 출산 장려 대책이 겉돌고 있다. 그동안 마련한 적지 않은 저출산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출산장려가 소리만 요란할 뿐 실질적이지 못한 셈이다.

출산 후 영유아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방접종이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특히 예방접종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민가정에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영유아의 예방접종 지원은 B형 간염, 홍역, 일본 뇌염 등 8종의 필수 예방접종에 그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 폐구균, 뇌수막염, 독감 등은 선택적 예방접종으로 분류돼 전액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들 선택적 예방접종 비용은 대부분 2~4회 정도의 추가접종이 필요해 최대 100만 원이 넘는다. 서민가정으로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당수

저소득층 가정은 예방접종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어 영유아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선택적 접종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예산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호주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선택적 접종을 필수 접종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무엇보다 저출산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인구 감소 및 잠재성장력 저하, 고령사회의 부양능력 위축 등을 낳아 국가의 잠재력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출산장려는 법국가적 과제다. 그럼에도, 출산 후 영유아의 건강에 필수적인 예방접종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출산 장려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없다. 출산 장려가 구호에 그쳐선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無 等 鼓

‘누군가 몰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어느 곳이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사토다. 미래 세계를 다룬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얘기가 아니다. 급격한 정보기술(IT)의 발달과 이로 인해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개인정보 덕분에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세상이다.

애플의 아이폰에 개인의 위치정보가 장기간 저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 역시 위치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소니사의 대표적 온라인 게임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에 해커가 침입, 세계 7500만명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현대캐피탈과 농협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진 데

이러 스마트 폰 사용자 80만명의 위치정보를 몰래 빼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주 2건이 넘는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해 모바일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3개 광고대행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도처에 널려 있다.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

려면 곳곳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탓이다. 오프라인에서도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CCTV)가 가는 곳마다 얼굴을 찍어낸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누군가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는 소니사의 대표적 온라인 게임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에 해커가 침입, 세계 7500만명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현대캐피탈과 농협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진 데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結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申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언론매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경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전 산 팀 2200-685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애인 전용 운전면허 연습장 생겼으면

장애인 보호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번번이 느끼는 일이다. 장애인을 운전면허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운전연습은 고사하고 학원 등록에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다. 현재 법적으로는 운전 교육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학원에서는 교육을 하도록 돼 있다.

한번은 지체 1급 장애인 한분을 모시고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신청을 하러 갔더니 장애인 연습 차량이 없다며 접수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적으로 장애인이 면허교습을 받을 경우 그 차량을 내주고 연습을 시켜주

도록 돼있지않느냐”고 항의하며 따졌더니 그때야 장애인 교육용 차가 어디 있는지 찾는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 연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조 장비를 달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학원들은 보조장비를 달아 놓은 차를 늘 비치해 두지 않고, 장애인 교육은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왜 안되냐고 따지는 경우에만 마지못해 보조장치를 달아 태워준다.

법적으로 운전전문학원들은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들에게 운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돼 있고, 이를